

입법정책정보

-제28호-



대전광역시의회

○ 입법정책정보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사항과 최신 외국정보 등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참고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 대전광역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됩니다.

|| 목 차 ||

I. 상위법령 제 · 개정	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
2. 아이돌봄 지원법	4
II.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 · 개정	6
1. 부산광역시 사회안전약자 등 안심물품 지원 조례	6
2. 대구광역시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8
3. 전라남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11
4. 경상북도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13
III. 자치법규 참고정보	15
IV. 최신 외국 입법정보	23
V.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5

I 상위법령 제 ·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67호, 2025. 4. 1., 일부개정]

□ 제정 · 개정이유

-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 관리책임기관 등의 직원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의 파견 요청 권한을 확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며, 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신속한 건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함.

<법제처 제공>

□ 주요내용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의 파견 요청 권한 확대(제15조제4항 및 제17조제3항 신설)

-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시 · 도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시 · 군 · 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요청하는 등의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에게 소속 직원을 시 · 도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시 · 군 · 구재난안전대책본부에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2) 시 · 도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시 · 군 · 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재난 피해자 등에게 지원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 안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긴급구조기관의 장 등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개선(제22조)

- 1)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2)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함.
- 3) 국무총리는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다. 집행계획의 수립 절차 개선(제23조제1항 및 제3항)

- 1) 집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 하던 것을,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만으로 확정하도록 함.
- 2)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는 세부집행계획의 작성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매년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외함.

라.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수정 요청(제23조의2)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재난 및 사고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 2)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려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제53조제3항 신설)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해양 재난 대비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하도록 함.

바.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신속한 건의 절차 마련(제60조제2항 신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함.

사.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마련(제66조의12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중운집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할 우려나 위험이 있는 등의 경우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요청하거나 해당 시설·장소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나 다중운집 행사의 주최자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질서유지 및 안전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거나 다중에게 해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아.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기준 일원화(제73조 및 제78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납부받은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932호, 2025. 4. 22., 일부개정]

□ 제정 · 개정이유

-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민간 기관에 대해서도 관리 ·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함.

<법제처 제공>

□ 주요내용

가. ‘아이돌보미’의 명칭을 ‘아이돌봄사’로 변경하면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 또는 등록된 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통칭함(제2조).

나. 아이돌봄사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육아도우미의 결격사유와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규정함(제6조 및 제6조의2).

다. 아이돌봄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적성 · 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제7조).

라.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아이돌봄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함(제9조제2항제3호).

마.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아이돌봄사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육아도우미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함(제10조의2).

바. 시 · 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이외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설치 · 운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사.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와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규정함(제11조의5 신설).

아.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지정 또는 등록 기준 및 운영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II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부산광역시 사회안전약자 등 안심물품 지원 조례

[시행 2025. 04. 16.] [부산광역시조례 제7590호, 2025. 04. 16., 제정]

□ 제정이유

범죄에 취약한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해 안심물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부산광역시를 구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에 취약한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해 안심물품을 지원함으로써 범죄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부산광역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 우려자”란 현재 직접적인 범죄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피해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안전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 나. 생활환경이 범죄에 취약한 1인가구 거주자 및 1인점포 운영자
 - 다. 언어적·정보적 측면에서 취약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
 - 라.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회안전약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안심물품”이란 위급상황 시 자기방어력을 높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품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심물품을 지원하는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에 사회안전약자 등 안심물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안심물품 지원사업) ① 시장은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심물품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의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한 직장 또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안심물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자
2. 범죄피해 우려자
3. 사회안전약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내용, 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전략 및 목표, 추진방향
2. 지원사업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3. 지원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평가 방안
4.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5. 지원사업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원활한 안심물품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부산광역시경찰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안심물품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조례 제7590호, 2025. 4.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04. 10.] [대구광역시조례 제6277호, 2025. 04. 10., 제정]

□ 제정이유

산불은 산림뿐만 아니라 인접한 기반시설과 민가, 농업시설 등 주변지역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최근 가뭄이나 고온현상 등의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발생의 빈도가 더욱 잦아지고 있고, 산림 주변의 개발확산으로 산불로 인한 인접지역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산림주변지역의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제도를 강화하여 산불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의 예방 과 산불로 인한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따른다.
2.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지역을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산림인접지역의 물리적 거리 기준인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을 말한다.
4. “산불”이란 「산림보호법」 제2조제7호를 따른다.
5. “산불안전공간”이란 산불이 산림인접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이격공간과 완충지대를 말한다.
6. “산불조심기간”이란 「산림보호법」 제31조제2항을 따른다.
7. “주요시설물”이란 사찰, 국가유산, 자연휴양림 등 주요 목조건축물과 국가기반시설 등 산불 피해 위험이 높은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인접지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예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림인접지

역 화재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의 기본방침과 추진목표
2.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대책
3. 산불에 대한 산림인접지역 주민의 대피에 관한 사항
4. 산불안전공간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을 위한 협력 요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보호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예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인접지역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림인접지역 및 주변지역 화재 발생 통계
2. 주변지역의 주요시설물 분포 현황
3. 주변지역의 주택, 공장, 축사 등 각종 건조물 분포 현황
4. 산림인접지역 주변 산림의 임상(林相) 현황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군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시설물 분포 현황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산불안전공간 조성 사업) ① 시장은 주변지역에 주요시설물, 주거밀집지역 등이 위치하거나, 산림인접지역에 대한 특별한 산불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연접한 산림에 산불안전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불안전공간의 조성 사업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산림을 떠 모양으로 벌채하는 이격공간 확보
2. 숲가꾸기를 통한 완충지대 조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인접지역 주변 산림의 주요 임상(林相)이 활엽수림으로 구성되어 산불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이격공간을 두지않고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실무협의체 구성·운영) ① 시장은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안전공간 조성 사업 대상지 선정의 지원
2.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분석 지원
3. 주변지역 화재 예방 및 산불로의 확산 방지 시책 운영 지원
4. 인접한 타 시·도의 시·군과의 연계협력 지원
5. 그 밖에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논의

③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구광역시 및 구·군의 산불방지 업무 담당 공무원
2. 「산림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관리기관의 담당자
3. 그 밖에 시장이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실무협의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시장은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림인접지역 및 주변지역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2.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제한에 대한 사항
3.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른 벌칙과 제57조제3항제2호, 제3호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소화기구의 지원) 시장은 주변지역의 마을회관, 노유자(노인·어린이)시설 등 공동이용 시설, 주택, 농장 등에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등 소화기구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6277호, 2025.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04. 03.] [전라남도조례 제6235호, 2025. 04. 03., 제정]

□ 제정이유

최근 증가하는 주취자* 문제로 인해 안전과 보호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주취자 보호와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취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연계와 보호를 강화하여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도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취자의 보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질서 유지와 도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취자”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등으로 판단력 및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주취자 보호시설”이란 의식이 없거나 몸을 가누지 못해 보호자 인계가 곤란한 주취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24시간 이내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취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2.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
3. 주취자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전라남도 경찰청 및 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주취자 보호 대상 여부 평가
2. 주취자 인수 및 보호 · 관리
3.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관에 인계 및 조치 요청
4. 가족 · 친지 등 연고자에게 통지 및 인계
5. 그 밖에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전라남도경찰청, 전라남도소방본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2025.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04. 07.] [경상북도도조례 제5232호, 2025. 04. 07., 제정]

□ 제정이유

경상북도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홍보대사”란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임무) 경상북도의회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의회활동 홍보와 「경상북도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작되는 홍보물 출연 활동
3. 의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참석 등
4.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회의 홍보를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홍보대사의 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 중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나 단체를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1. 의회의 위상 제고에 적합한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그 단체
2. 의회의 사회적·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의장이 의회의 의정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이나 단체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민 또는 경상북도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람 및 단체를 우선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3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④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의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운영 등)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의회의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의회 각 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② 의장은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홍보대사에게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의회 홍보업무담당은 의회 홍보대사의 위촉 현황을 별지 서식의 경상북도 홍보대사 관리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예우 등)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3조에 따른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할 때는 의전을 갖추 최대한의 예우를 하고, 이에 필요한 의정활동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3조에 따른 홍보대사 임무에 수반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홍보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II 자치법규 참고정보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1.

[안건번호: 의견25-0133 /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 의뢰안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 주요내용

[질의요지]

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생계지원을 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본문의 소득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도 생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합니다(각주: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참조).

먼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하 질의 가에서 “전세사기피해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 시의 이사비, 월세 등의 비용을 지원하려는 취지는 이러한 주택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주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정하여 기부·보조, 그 밖의公款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현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이라 한다)이 실효되는 날 이후 전세사기 특별법에 준하여 새롭게 제정·시행되는 지원 법률이 없다면, 질의요지와 같은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따라서,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는 「지방재정법」의 규정, 귀 기관의 재정적 상황,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환경 및 다른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조례 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내에 대하여

전세사기특별법 제28조에서는 제2조제3호의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전세사기피해자”라 한다) 등을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보도록 하면서, 그 지원의 기준·기간·종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긴급지원의 한 종류로 ‘생계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는 긴급지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일 것(제1호 본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이하 “성북구조례”라 한다)를 개정하여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생계지원(이하 “생계지원”이라 한다)을 할 때,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지원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생계지원을 받는 전세사기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따라 규율하려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해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따라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추5186 판결 참조).

이 사안에서 성북구조례를 개정하려는 목적을 살펴보면,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주거지원 주택임주 시의 이사비 지원 및 월세 지원 외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함으로써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하여 성북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한편,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생계지원을 규정한 취지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이들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하려는 것으로(제1조), 성북구조례 개정안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피해 회복의 대상이 「긴급복지지원법」보다 특정된다는 점에서 양자의 규율 목적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성북구조례를 개정해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본문의 소득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생계지원을 할 수 있게 되더라도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필요와 재정 수준에 따른 복지 행정의 차이에 해당하는 것이지 「긴급복지지원법」의 입법목적 및 효과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각주: 법제처 2024. 3. 29. 의견제시 24-0023 참조).

아울러, 일반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조례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안과는 달리 조례 입안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조례 입안자는 그 조례 제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예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추545 판결 참조). 따라서, 이에 따라 마련된 조례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라면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판단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24. 3. 29. 의견제시 24-0023 참조).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긴급복지지원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2.

[안건번호: 의견25-0143 / 요청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의뢰안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 및 같은 법 제21조제2항·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할 때 각각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 주요내용

[질의요지]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 및 같은 법 제21조제2항·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할 때 각각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에서는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면서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집행을 통제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1. 11. 29. 선고 2011추87 판결 참조). 나아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참조).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처분·관리에 관한 지방의회의 통제수단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제10조제1항),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 회계연도별 일정 범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며(제10조의2제1항),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의 사용료 면제 사유 중 일정한 사유에 대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것으로 규정(제24조제1항제4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의 하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규정하고 있고(제47조제1항제6호),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서는 취득·처분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 재산의 범위를 공유재산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의 대상이 되는 공유재산의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일정 범위의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집행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사전적 개입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공유재산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그 갱신에 관한 지방의회의 통제수단을 직접 규정하거나 해당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공유재산의 관리가 그 행위의 성질상 공유재산의 처분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가 사전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고 볼 근거는 없어 보이고,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유재산 관리행위에 대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법제처 2023. 6. 9. 의견제시 23-0236 참조).

그러나, 공유재산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공유재산의 기준가격이나 기준면적이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나 면적 이상인 경우에 지방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그 갱신에 대해 조례에서 어떠한 합리적인 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사실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그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결과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집행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19. 5. 3. 의견제시 19-0135 참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부적법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그 갱신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근거하여 사후적으로 감시·통제할 수 있는 점 또한 이 사안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집행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자치법규 입안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제4호)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서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제1호),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제2호) 등을 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법령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경우에 지방의회는 사안별로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에 대한 개별적인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각주: 법제처 2020. 10. 29. 의견제시 20-0207 참조), 해당 규정 외의 사유로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사전적 개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적인 동의권 행사 외에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질의 가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방의회가 사실상 사용료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결과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집행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법령상 사용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민의 혜택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20. 10. 29. 의견제시 20-0207 참조).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IV 최신 외국 입법정보

베트남, 「전자서명 및 신뢰서비스 시행령」 제정

□ 주요내용

베트남 정부는 2025년 4월 10일 시행되는 「전자서명 및 신뢰서비스 시행령」을 통하여 전자서명 인증서의 분류 체계와 기술 요건, 유효기간 등 전자서명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으로 인하여 기존 대면거래가 온라인 거래로 상당수 대체되고 관련 법제 정비의 중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조치이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서명 인증서,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

시행령에 따르면, 전자서명 인증서는 △국가 전자인증서비스 제공기관의 원본 인증서 △신뢰서비스 제공기관용 인증서 △공인 전자서명 인증서 △전용 전자서명 인증서 등 총 4가지로 분류된다.

2. 유형별 전자서명 인증서 유효기간 세분화

- 국가 전자인증서비스 제공기관의 원본 인증서: 25년
- 타임스탬프 및 전자문서 인증서: 최대 5년
- 공인 전자서명 인증서: 최대 10년
- 일반 공인 전자서명 인증서: 최대 3년
- 전용 전자서명 인증서: 최대 10년

3. 기술적 요구사항 구체화

서명자 검증, 인증서 유효성 확인, 공인 인증 서비스와의 연동, 정보 저장 및 삭제, 서명 성공 여부 표시 등 필수 기능을 갖추 것을 요구하였다.

4. 전용 전자서명의 안전성 확보 요건

전용 전자서명은 「전자거래법」 제22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관 또는 조직 내부 업무, 전문 분야 활동, 공식 대외 활동 등에서 자체적으로 사용된다. 이 경우, 발급 기관은 해당 서명의 안전성과 법적 책임을 진다.

개인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공인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받고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서명 사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은 전자서명 솔루션을 도입하고 보안 체계를 구축하며, 조직 내 전자서명 정책 및 권한 위임 규정을 수립하며, 서명 유효성 검증 절차 및 보관 체계 확립하여야 한다. 이번 시행령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정부의 2030년 로드맵을 구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디지털 시민 사회 구성에 필요한 여건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베트남 정부포털-정책 · 법률제정(2025.02.24.)

V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유럽의 재무장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유럽의 역내 무기 거래 강화와 우리나라의 무기 수출 방안 -

□ 주요내용

2025년 3월, EU가 ReArm Europe과 '방위태세 2030'을 통해 재무장을 결정했다. 이는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낮춰 독자적인 방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보 관련 적자 재정 운용 허용, 재정을 담당할 SAFE 신설, 유럽투자은행과 민간의 방산 분야 투자 허용 등이다. 향후 우리나라는 EU와의 안보방위파트너십과 NATO 내 IP4 국가로서의 역할을 적극 활용하고, 방산업체의 현지화 전략과 유럽과의 안보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유럽의 재무장 전략에 대한 참여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2025년 3월, 유럽이 재무장을 결정했다. EU는 3월 4일, ReArm Europe을 공개하고 4년간 8천억 유로를 투자해 안보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3월 19일에는 『유럽 방위백서-방위태세 2030 (White Paper for European Defence - Readiness 2030)』(이하 '방위태세 2030')을 발표해, 공동 무기 조달의 절차와 참여 조건, 유럽안보활동(Security Action for Europe, SAFE) 프로그램 신설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했다. 재무장 정책은 EU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투자은행(EIB)과 민간 자본의 국방 부문 투자, EU 사회 및 구조 기금의 안보 기금으로 전용, EU 기준을 초과하는 재정 적자 등이 전면 허용되면서 EU 재정 구조와 정책에 영향이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재무장 결정의 배경으로는 러우 전쟁 장기화와 같은 지정학적 위기 심화,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야기한 유럽과 미국 간 안보 갈등을 들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에 대해 방위비를 GDP 대비 5%까지 증액하도록 요청하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NATO를 탈퇴할 수 있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 러시아와 러우 전쟁 휴전 논의 시, 우크라이나를 가장 많이 지원해온 유럽을 배제했다. 유럽과 미국의 대서양 동맹이 약화됨에 따라 유럽에서는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없는 NATO'에 대비하기 위해 자주 국방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MAGA)' 전략이 '유럽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Make Europe Great Again)'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본고는 EU가 재무장 전략을 채택한 배경과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당면과제와 향후 전망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유럽 재무장 전략의 배경과 주요 내용

(1) 배경

유럽은 2016년 『EU 글로벌 전략』에서 전략적자율성을 공식 채택하며 안보 역량 강화를 추진해왔으나, 재정 문제와 회원국의 이견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2025년, 유럽이 재무장을 선택한 것은 무엇보다 러우 전쟁의 장기화로 러시아의 안보 위협이 최악에 달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러시아 및 친러 성향의 벨라루스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폴란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는 2021년~2023년 군사비 지출을 각각 106.9%, 65.4%, 58.9%씩 늘리는 등 각국은 러시아에 대한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대서양 동맹 약화를 들 수 있다. NATO 회원국들은 2014년 정상회담에서 국방비 지출을 2024년까지 2%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2024년까지 32개국 중 23개국이 이 기준에 도달했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는 이를 5%까지 높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2024년 기준, GDP 대비 폴란드의 국방비가 4.12%로 가장 높았으며, 미국도 3.38%로 5%에는 못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리한 주장이었다.

더불어 유럽의 군사력이 위기 대응에 역부족이라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유럽은 냉전 종식 이후 국방비를 계속 축소해, 2014년 동유럽의 국방비가 1990년 대비 34.85%, 중부 유럽은 49.34%, 서유럽은 83.1% 수준으로 줄었다. 러우전쟁 발발 이후 국방비가 증액되었으나 여전히 중부 유럽의 2023년 국방비는 1990년 대비 120.92%, 서유럽은 111.22%, 동유럽은 75.98%로 제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동유럽의 국방비 증가세가 더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국방비 증액이 지역별,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자, EU가 주도해 전반적으로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2) ‘방위태세 2030’의 목적과 주요 내용

‘방위태세 2030’의 목적은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낮춰 독자적인 방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예산은 2025년부터 5년간 최대 8천억 유로로, 1,500억 유로는 EU 공동방위기금으로, 6,500억 유로는 회원국 분담금으로 충당된다. 첫 번째 주요 내용은 국방 재정의 유연성 확보에 관한 것이다. EU는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SGP)을 통해 회원국들에게 연간 GDP 대비 3% 이상의 적재 재정 금지, GDP 대비 60% 이상의 누적 적자 재정 운용을 금지했다. 반면, 미국 등은 대규모 적자 재정으로 경제 부양책을 실행하고 있어, SGP가 지나친 재정 제약 조치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방위태세 2030’은 SGP의 일반면책조항(General escape clause)⁵⁾을 발동해 회원국들이 3% 외에 추가로 GDP 대비 1.5%의 국방비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경우 최대 6,500억 유로에 달하는 국방비 확충이 가능해진다.

둘째, 1,500억 유로의 공동 대출 기금을 담당할 유럽안보활동(Security Action for Europe, SAFE) 프로그램이 신설되었다. SAFE의 요체는 무기 공동조달로, 탄약과 드론, 미사일 방공

및 방어 시스템, 포병 체계, 사이버 안보 등의 무기를 공동으로 확충해 유럽의 안보 역량과 우크라이나 지원도 함께 강화할 계획이다. SAFE의 회원국 대출은 최장 45년이며, 총액 중 15%까지 선지급도 가능하다(SAFE 규칙 제10조제2항). SAFE의 공동 무기 조달 조건은 EU이나 EFTA 회원국, 우크라이나 중 한 개 이상이 프로젝트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무기 비용의 65%에 해당하는 부품이 상기한 국가 내에서 생산되어야 한다(제16조제8항).

셋째, 유럽투자은행(EIB)의 역할도 확대되었다. EIB는 민간과 국방을 혼합한 이중용도 프로젝트에만 투자할 수 있었으나, 향후 군사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 투자도 허용된다. 넷째, 연기금, 국부펀드 등 민간 분야의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졌다. 마지막으로 EU 예산 중 사회 및 구조기금 일부를 국방 분야에 전환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로써 EU는 경제 및 안보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를 통해 EU는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유럽 방위산업 분야의 역량,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무기의 자체 조달을 제고해 미국, 한국 등 외부 국가에 대한 의존을 낮출 계획이다.

2. 향후 전망과 당면과제

(1) 향후 전망

유럽의 재무장 전략은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재무장 관련 재정 확대로 EU의 안보 역량이 강화되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우크라이나에 대규모로 무기를 지원하면서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했으나, '방위태세 2030' 실행으로 무기 생산량이 증가하고 방위산업이 전반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폰테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재무장 계획에 대해 “유럽은 책임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ReArm Europe 계획이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유럽”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럽의 미국에 대한 무기 및 안보 의존도도 감소해 2016년부터 EU가 공식적으로 추구해온 전략적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유럽의 방위산업이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까지 EU가 8천억 유로를 방산업에 투자함에 따라 제조업과 R&D 분야의 제도약을 주도하게 된다. 최근 군비 부족으로 한국, 미국 등에서 수입하는 무기량이 증가했으나, ReArm Europe의 ‘바이 유러피안’ 정책으로 인해 유럽 내 무기 거래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글로벌 경쟁력이 상승하고 있는 독일의 라인메탈, 프랑스의 탈레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 주요 방산업체를 중심으로 연관 기업 및 산업군의 발전도 촉진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첨단 소재, AI, 드론, 사이버, 우주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에 의해 민간 첨단산업에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고용이 확대되고 전반적인 인프라 투자도 증가해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례로 독일 라인메탈의 매출은 2021년 57억 유로에서 2030년에는 400억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루마니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등에도 공장 10곳을 동시 건설하는 등 파급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 제조업 분야의 고용이 늘어나고, 전반적으로 경제가 회복세로 접어들 수 있다.

(2) 당면과제

재무장 계획이 효율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당면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유럽의 재정 부담이 악화될 수 있다. '방위태세 2030'으로 재정 유연성이 증대함에 따라 공공 부채 비율이 높은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등이 과도한 부채에 시달릴 수 있다. 부채 한도와 관련된 재정 준칙을 폐기한 독일도 재정건전성에 대한 압박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더 나아가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군비 증강으로 인해 복지 비용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도 제기되고 있다.

둘째, 재무장에 소극적인 국가도 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ReArm Europe과 '방위태세 2030'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포르투갈,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셋째, EU가 재무장 전략을 통해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할 경우 NATO, 미국 등 기존 동맹국과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EU는 2002년 NATO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으며, 2016년, 2018년 『EU-NATO 공동 선언』을 통해 안보 협력 강화를 천명하는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EU가 재무장 전략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경우, NATO와의 안보 협력이 약화되고 유럽-미국 간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그 외 시민 사회가 민간 기업의 국방 분야 참여에 대해 반발할 가능성도 있으며, 국방산업에 대한 EU의 투자 권한에 대한 법적 기반이 아직 불완전하다는 문제도 있다.

4.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

우리나라는 EU의 재무장 전략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향후 우리나라의 대유럽 무기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에 대비해 2024년 EU와 체결한 안보방위파트너십과 폴란드, 루마니아 등 우리나라의 방산 협력국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재무장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산업체들은 현지 회사와의 합작 등 현지화 전략을 통해 65%의 역내 의무 생산 비율을 맞추어 프로젝트 참여를 도모할 수 있다. 일례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24년 10월 폴란드 회사와 천무 생산 공장을 설립하기로 계약한 바 있다.

둘째, 방산은 무기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이념까지 포괄하는 거래임을 인식하고 유럽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EU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으며, NATO와는 IP4 국가로서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방위 산업을 외교 자산화하고, 유럽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보다 심화된 제도로 승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